

보도시점 2023. 11. 14.(화) 배포 즉시

설문 결과 수용,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1. 14.(화) 한겨레신문, “52시간제 유지 여론에도, 정부 ‘일부 업종 유연화’(1면)”, “‘연장근로 늘리기’ 끼워 맞추려, 노동자·사업주 목소리 취사선택(3면)” 기사 등

○ 정부가 이날 정책 방향의 근거로 삼은 ‘대국민 설문조사’의 설계와 해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는데다, 여전히 업종과 직종별로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유지된 탓이다.

2. 설명내용

- 설문조사 결과,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업종·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에,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, 장시간 근로,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“필요한 업종·직종에 한해, 노사가 원하는 경우”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- 한편,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, 이를 기초자료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지영 (044-202-7994)
		담당자	서기관	이창주 (044-202-7543)